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기재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

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최준호
전화 054-429-4224 팩스 054-429-4675

보도자료
2023. 9. 18.(월)

제 목

1,800명의 선거구민에게 6,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現김천시청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(지청장 고필형)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소속 공무원들과 읍·면·동장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 등 약 1,800명에게 약 6,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현직 김천시청 A○○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9. 14.(목) 구속 기소하고,
 - 김천시청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천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전·현직 공무원 24명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김천지청은 직접 수사를 통해,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거나 공무원들의 사비를 상납받아 명절 선물비용을 조성한 후 1,8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범행 전모를 밝혔음
-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향후 예정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,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

I

피고인

- A○○(68세) : 現김천시장, 재선
-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3명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21명 (현직 11명, 퇴직 10명)
※ 9. 14.(목) 기소한 25명 외에도 '22. 11.~'23. 2. ▲현직 5급 공무원 B○○을 구속 기소하고, ▲현직 공무원 6명, 퇴직 공무원 3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33명 기소(2명은 2회 기소)

II

주요 수사경과

1차 수사경과 : '22. 1.~'23. 6.

- '22. 1. 19. 경찰, 수사 개시
- '22. 10.~11. B○○ 등 10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송치
- '22. 11. 25. B○○ 구속영장 직접 청구 및 발부
- '22. 11.~'23. 2. B○○ 구속 기소 및 공무원 9명 불구속 기소
- '23. 6. 13. B○○ 등 9명 1심 유죄 선고(1명 1심 재판중)

2차 수사경과 : '23. 7.~'23. 9.

- '23. 7. 3. A○○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제보 접수
- '23. 7. 13. 김천시청 압수수색
- '23. 8. 31. A○○ 구속영장 발부
- '23. 9. 14. A○○ 구속 기소 / 공무원 등 24명 불구속 기소

III

공소사실 요지

- 김천시장 A○○은 김천시청 비서실장 등과 공모하여,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① 총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,800만원 상당의 현금·선물을 제공하고, ② 김천시 산하 22개 읍·면·동장들을 통하여 선거구민 약 1,450명에게 합계 2,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

IV

이 사건의 특징

-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합계 3,300만원 가량 업무 추진비를 전용하여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, 일부 공무원들은 합계 1,700만원 가량 사비를 상납하여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하였음
 -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'명절 선물 명단'을 수정·관리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였고,
 - 22개 읍·면·동장에게 '명절 선물 명단'을 전달하고 읍·면·동장들로 하여금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되었음
- 이 사건은 현직 시장이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총 1,80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약 6,600만원 상당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사안으로서,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임
 - 특히,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

V

수사의의 및 향후계획

- 현직 시장이 금품선거 및 공무원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는 제보를 확인한 이후 직접 수사 역량을 적극 투입하고, 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구속 기소함으로써, 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였음
- 이 사건 수사로 현직 시장을 포함하여 2명을 구속 기소하고, 31명의 전·현직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,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범죄를 엄단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, '24. 4. 10.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 